
「2020-5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7. 28.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 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코로나19 사태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 지역경제보고서 • 실물경제 속보(KIET 경제·산업 동향)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2. 재정 (3P)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P)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5~8P)	•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재원분담 체계 재정립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대응방안 •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그리고 지방재정의 논제 • 지방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 ‘한국판 뉴딜’ 과 Post-Corona 시대 강원도의 대응 •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 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 •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KDB미래전략연구소 KDB미래전략연구소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9~11P)	•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배포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지자체 맞춤형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 한국형 그린뉴딜 세계에 알린다…유엔의 환영 받아 •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8조 원 판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 경제

출처

■ 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 (총평) 2/4분기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 $\Delta 3.3\%$ 성장률을 보임
 - ①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1/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반등(0.7%)
 - ② 순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큰 폭 감소($\Delta 4.1\%$)
- (평가 및 전망)
 - ① 2/4분기 성장 부진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함
 - ② 우리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
 - ③ 3/4분기는 경기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등폭이 관건임
- (대응방향)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 ① 한국판 뉴딜 및 3차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3개월내 75% 이상)
 -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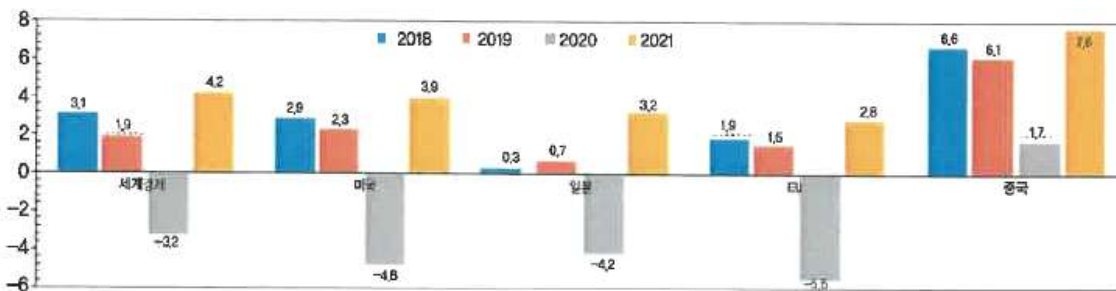
[바로가기](#)

■ 코로나19 사태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미 세계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실물경제는 당초 기대만큼의 복원효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및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



-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비상경제시국에 직면하여 단기적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패닉상태 차단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각국은 경기부양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최적화하거나 명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 축소 및 투자유인 제고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잉유동성 환경 하에서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잘못 설계된 경기부양책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안정성 심화 등 부작용만 부각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각국 정부는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정밀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짐

[바로가기](#)

1.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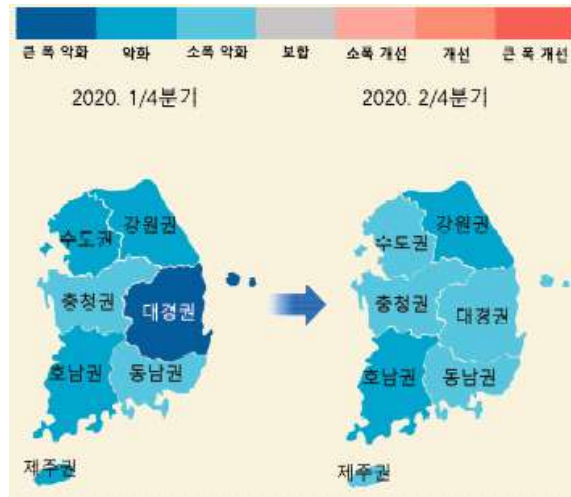
출처

■ 지역경제보고서

한국은행

- (경기개황)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 지속으로 모든 권역에서 악화된 가운데, 전분기에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대경권을 비롯하여 수도권, 제주권의 경기 하락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 경기】



- (강원권 경제) 2/4분기 중 강원권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증가,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리포트)
 - ① 강원지역 관광, 코로나19 여파로 부진 지속: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 국내여행의 해외 여행 대체 효과, 청정 강원 이미지 부각으로 빠른 회복 예상
 - ② 강원 영동지역 해안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창업 지속: 코로나19확산 장기화, 커피전문점 과밀집화(경쟁심화)로 하방리스크가 잠재하나, 향후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 성장세 지속 전망
- (향후 전망) 향후 권역별 경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도권·충청권·대경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바로가기](#)

■ 실물경제 속보(KIET 경제·산업 동향 2020년 7-2호)

산업연구원

- (해외경제) 중국 2분기 성장률 예상치 웃도는 3.2% 기록
- (국내경기) 2분기 실질GDP 투자 감소 여파로 역성장, 소비는 반등
- (금융) 6월 기업대출 큰 폭 둔화, 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 금리 하락, 원/달러 1,200원 내외
- (산업별 동향) 5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비 감소 지속
- (고용)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3% 감소
- (수출입) 6월 수출 △10.9%, 수입 △11.2%, 무역수지 36억 달러 흑자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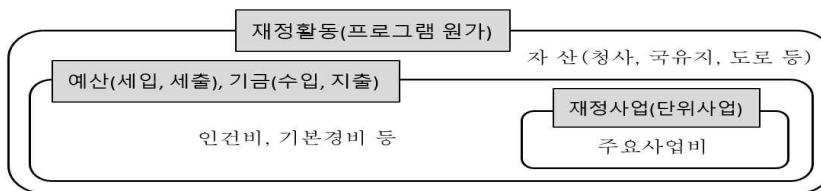
- (재정 전망)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20~2090년(70년간)이며, 2020년 현재의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을 전망함
 - *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전망 결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 원 흑자, 2090년 226.7조 원 적자(GDP대비 -5.48%) 예상
 - ①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2055년 소진 전망
 - ②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 원에서 2090년 32.1조 원으로 큰 폭의 적자 전망
 - ③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2033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2048년 소진 전망
 - ④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 원에서 2090년 6.7조 원 전망
- (시사점)
 - ①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 예상
 - ②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 필요
 - ③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 검토 필요

[바로가기](#)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정 성과관리체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성됨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의 범위]



- (평가 결과)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주요사업비)으로 한정(예산총액 대비 24.5%만 평가)되고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비효율 발생
- (결론 및 시사점)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의 명확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기본경비 포함, 정책과 재정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6.30. 시행 '20.7.1.)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 바로가기	법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7.1.) －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바로가기	법제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7.1.) －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바로가기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재원분담 체계 재정립

-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지방재정 부담 증가)
 - ① 2019년 당초예산 기준 1,932개(90.6조 원) 국고보조사업 수행
 -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연평균 8.2% 증가(2008년 12.1조 원 ⇒ 2019년 28.7조 원)
 - ②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함
 - *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비(51.5조 원)가 총 사업비의 56.9%를 차지함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부재)
 - ①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사회복지 분야 70개 사업 중 46개가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필요)
 - ①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121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상의 111개 사업 간 재원분담 기준 연계 필요
 - ②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현재 수행되지 않는 사업은 규정에서 삭제하고, 수행 중인 사업은 포함 필요
- (정부 간 복지사업 관련 역할 분담)
 - ① 중앙-지방 간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배분원칙 개선 필요
 - ② 현행 중앙-지방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에 중앙-광역-기초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9dfdaff1d86ba3c1f8353b4d1b61b8c5_img.jpg\) 바로가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대응방안

- (코로나19와 지방재정의 영향)
 - ① 지방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3.0%로 추정한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초예산 대비 5조 6천억 원(6.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정부추경 시 세입정정에 따른 감액분은 차차년도 지방교부세 조정분에 반영되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함
 -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시 지방재정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업종 및 분야별 긴급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경기회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안)
 - ①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기금의 통폐합 필요
 - 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
 - ③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세입 확보 및 기존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적 공간(Fiscal Space) 확보
 - ④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지역주민 요구 반영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642aa997563f9a325b310230bb5078b7_img.jpg\)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그리고 지방재정의 문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을 만한 재난기본소득을 등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지방재정운영 측면상 심도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코로나19와 대응동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마련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재정지원을 함
-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경기도 1조 3,642억 원, 시·군 1조 1,926억 원 규모로,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50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초과세입, 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함
- (재난기본소득이 지방재정운용에 주는 논제)
 - ①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경쟁과 다양성에 기반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필요
 - ②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의 전반적 검토와 현실성 있는 개선 필요
 - ③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 분석 및 재난대응준비금 비축
 - ④ 국민들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⑤ 지역주민들은 집단이기심으로 무리한 재정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공익에 합당한 재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선택 필요

[!\[\]\(96cc62f861fdd6e50510c0224a756dff_img.jpg\)바로가기](#)

■ 지방재정분권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
학회

- (서론) 올해 1단계 재정분권(세입분권)에 이어 2단계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편)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타당성 점검
-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지방소득세 전체를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와 법인분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로 구분(4가지 시나리오)하여 결과 도출
 - ① 개인분 및 법인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소득세율 인상의 확충규모는 2배 인상 시 16.7조 원, 1.5배 인상 시 8.3조 원 확충
 - ② 법인분에 한정할 경우 시나리오별 각각 7조 원과 3.5조 원 확충
- (정책함의)
 - ①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방소득세 인상은 사회복지비 팽창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자치구 재정에 큰 기여를 함
 - ② 법인분에 한정할 경우 시·도의 지방세입 순증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③ 전체 지방소득세 세원 대상의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지역간 세입격차를 확대하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외의 편재 문제가 악화됨 ⇒ 이는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개선, 광역-기초의 공동세화 등 별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f95dab70c751fda7d824b8b03650f7aa_img.jpg\)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한국판 뉴딜’과 Post-Corona 시대 강원도의 대응

강원연구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필요)
 - 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 ② 코로나19를 계기로 ‘New Normal’에서 ‘Next Normal’ 시대로 이행 예상
 - ③ 당면한 위기 극복과 ‘Next Normal’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환 전망)
 - ①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 강화
 - ② 비대면·비접촉 확산에 따른 언택트 현상과 더 나아가 온택트 사회·경제로의 진전
 - ③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④ 환경의 중요성 재인식
 - ⑤ 코로나 디바이드(Divide) 현상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 정책방향’ 하에 총 28개의 세부과제 제시
 - ② 2020~2025년에 걸친 160조 원의 투자와 190.1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강원도의 대응 전략)
 - 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정합성 강화(지역계획의 재구조화)
 - ② 보완·보강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세밀한 대응 뒷받침(농업의 디지털전환 등)
 - ③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재편 및 고도화 추진
 - ④ 계획 추진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⑤ 변화를 이끌 지역인재 양성
 - ⑥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생활형 방역체계 구축, 범 지역적 협업체계 구축 등)

[!\[\]\(e10773081adcaeab632f9dd4c8931cd5_img.jpg\) 바로가기](#)

■ 학교법인의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연구목적)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므로 재산세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주요내용)
 - ① 지방세법상 학교 부지는 소유 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준하여 면제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1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추가적으로 운동장 면적과 부설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면적을 고려하는 방식(2안), 관련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또는 교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교지 기준면적의 1.5배를 적용하는 방식(3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연세대 국제캠퍼스 사례 적용 시 면제액: (현행) 30억 원 대비 (1안) 24.5억 원, (2안) 28.6억 원, (3안) 8.9억 원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궁극적으로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정책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무적으로 명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0ac73c45806a78de248a19d9a2dbe7a6_img.jpg\)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

- (배경) 독일은 다른 EU국가와 함께 ‘유럽 그린딜’에 합의하는 등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수소산업의 육성을 선택
- (지원규모) ‘20.6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향, 수소전략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 ⇒ 수소기술의 사업화(70억유로) 및 국제협력 촉진(20억유로)을 위해 총 90억유로 지원

독일의 주요 수소산업 지원정책 현황

지 원 정 책	금 액
① ‘06~’26년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국가 혁신프로그램	21억유로
② ‘20~’23년 에너지 및 기후기금에 따른 그린수소 개발, 수소기술 관련 에너지 연구	5.3억유로
③ ‘20~’23년 수소관련 기술 시장화 목적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6억유로
④ ‘20~’23년 생산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시설 지원	10억유로
⑤ ‘20~’30년 국가수소전략(수소기술의 사업화, 국제 협력)	90억유로

자료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2020), "The National Hydrogen Strategy"

- (국내 동향)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 각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내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대응 중에 있으며, 필요 시 독일과 같이 기술의 개발 및 국제시장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① 수소경제로드맵(’19.1월) 활성화 방안 발표
 - ②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월)
 - ③ 수소경제위원회(’20.7월) 출범

[바로가기](#)

■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 (배경) EU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을 발표(’19.12월)
- (현황) ‘유럽 그린딜’은 유럽 기후법안 채택과 1조 유로 규모 그린딜 투자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건축(에너지절약형 건물 리모델링), 산업(산업혁신 지원으로 녹색경제 선점), 수송분야(민간항공 수송분야 청정에너지화) 등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월에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를 발표함 ⇒ 탄소중립 이행 시 소외 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 ‘20.6월 현재 400억 유로 수준의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확보

- (기대효과)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법을 채택하여 법적 규제와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유럽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언) 한국의 산업은 현재까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집약산업이 대부분으로, 산업생산 전반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구입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그린화 유도 필요

[바로가기](#)

KDB미래전략
연구소

KDB미래전략
연구소

5. 뉴스브리핑

출처

■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배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자료(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를 배포함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구분	주요 내용
소상공인·기업 관련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경감(간이과세제도 확대)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세액공제제도 개편)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소득세·법인세 감면)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세액공제 확대)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6. '맞술'(조미용 주류)의 과세대상 제외로 소비자 가격 인하(주세법 완화)
개인 등 관련	7. 지금 소비활동하면 연말정환 환급금 확대(카드공제 한도 인상)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로 국민재산 증식 응원
	9.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취업 지원(소득세 감면)
	10.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바로가기](#)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이에, 디지털금융의 혁신(전자거래금융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의 촉진과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함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자체 맞춤형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하여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함
-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 온라인 홈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임
 - * 사례: 경북 구미시 ‘로봇직업혁신센터’(295억 원), 전북 ‘비대면 행정환경 조성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온라인 홈서비스’
- 그린 뉴딜은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 사례: 경남 창원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400억 원), 전북 ‘재생 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360억 원), 전남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충남 당진시 ‘공공주도 그린 뉴딜, 민간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 에너지 융복합 산업기반 조성’

[바로가기](#)

■ 한국형 그린뉴딜 세계에 알린다...유엔의 환영 받아

환경부

- 지난 7월 24일 환경부 장관은 유엔 사무차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유엔 사무차장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환경위기 극복 전략인 ‘그린뉴딜’ 수립 전략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 또한, 환경부-유엔은 파리협정 및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그린 뉴딜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함

【 한국형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 초중고 2,890동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3배 이상 확충 - 아파트 500만호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 스마트 그린산업 10개 구축 - 녹색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 그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⑧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등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8조 원 판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 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힘
- 3차 추경예산은 총 3,177억 원으로,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 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 원을 지원하게 됨
-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 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됨(* 강원 판매액: 1,809억 원)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24일 모든 자치단체들과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함
-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협조사항인 ▲세입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설명함
- 세부내용으로는 세입분야는 ①지방세 등 세입 분석 정확성 제고, ②교부세 전액 편성, ③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예탁 활용, ④지방채 활용 방안 등, 세출분야는 ①경로 의존적 점증주의 예산편성 탈피 및 세출구조조정 실시, ②국가 중점과제 연계 강화, ③집행가능성 고려 등임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지난 7.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 관련 3법)을 의결함

【부동산 관련 3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200%→300%),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주택 중부세 공제(6억원) 폐지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 거주기간 추가
	2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적용시기 수정의결)
법인세법	법인 주택 양도차익의 추가과세 세율 인상(10%→20%)

[바로가기](#)

기획재정부